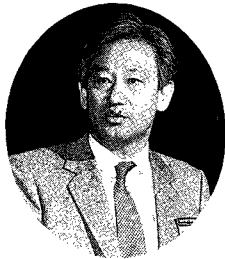


強力한 原子力政策의 闡明



노 윤 래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장

새 정부가 들어섰다. 지난 30여 년간의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나고 우리 국민이 직접 선택한 민意的 새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5년전 6공화국이 탄생한 이래 우리 국민은 반만년의 역사상 그 유례없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만끽한 것은 사실이나, 자유가 마치 무질서와 방종인양 행동하였고 민주시민의 의무는 버려둔 채 권리만을 추구한 나머지 사회질서는 문란해졌고 윤리도덕은 땅에 떨어져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한탄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작금의 실정이다.

땀 흘려 번 돈이 아닌 만큼 자연히 과소비하게 되었고, 비교적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일하고자 하는 근로의욕의 쇠퇴는 생산성의 저하와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가져와

급기야는 우리 경제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같은 시기에 부정부패의 척결, 사회기강의 확립, 경제의 활성화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신임 대통령의 강한 의지 아래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환영하면서 원자력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새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이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해 본다.

에너지政策 國民合意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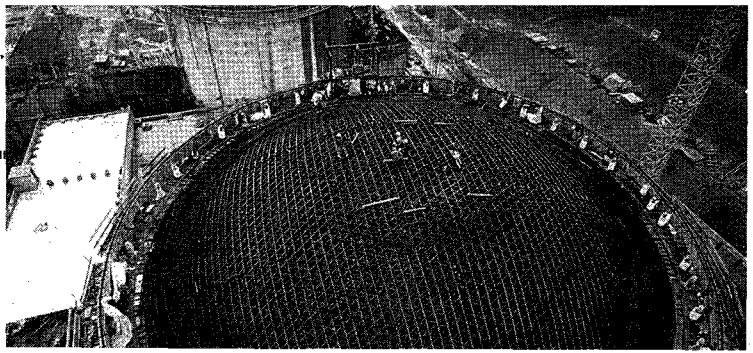
사회학자들이 말하듯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 중요요소는 식량과 에너지이다. 사람도 동물인 이상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달리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문화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이에에는 에너지의 확보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이 결핍되고 그나마 나날이 고갈되고 있어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무려 92%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쌀의 개방, UR 정책의 타결 등 우리 사회에서 농산물에 대한 논의는 매일 같이 심도깊게 전개되고 있으나 실상 국내 소비에너지의 전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가까운 日本의 경우를 살펴보자. 日本도 우리와 같게 에너지사정이 어려운 나라이다. 日本은 인구가 우리의 3배이며 국민총생산은 10배가 넘는 大國으로 수입에너지는 실로 엄청난 나라이다. 에너지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특유의 부지런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에너지정책에 관한 日本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국민에 대한 계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東京大學의 신입생은 모든 학생이 전공에 관계없이 에너지강의를 필수교양과목으로 이수치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20여년전의 석유과동 이래 개편된 學制에 따라 자연계는 물론 예체능계 학생에도 필수적으로 에너지강의를 수강케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東大 출신이 대부분 日本의 政界는 물론 사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日本 국민에 대한 에너지 계도에 그들의 역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모든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하고 있으며 에너지 탄생치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선진 산업국가인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國民 눈치보는 政策은 困難

한국은 日本보다 에너지사정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에도 국민의 생활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가격보다는 편리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석탄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LNG로, LNG에서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전력수요의 증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발전용 연료로서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보다 값이 저렴하고 수입이 용이한 우라늄을 택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지속적인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원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와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문가의 안전 분석에 의하면 인류가 개발한 산업 설비 가운데 가장 안전한 시설이 원자력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원전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 이른바 「남비」 증후군에 사로잡힌 일부 지역주민의 집단시위와 이로 인한 사회적 소요가 싫어 국가의 중대한 에너지정책을 수행치 못하고 알뜰한 선심과 눈치만으로 국민을 이끌어 온 지난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다시는 없어야 될 것이다.

1980년 국민투표에 의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던 스웨덴 정부가 12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없어 작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그 결정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모임인 로마클럽이 현실적으로 원전 이외에는 전력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원전을 반대해 온 입장을 철회한 것도 지난해의 일이다. 대형사고를 경험한 옛 소련은 물론 미국도 원전이 가까운 장래의 유망한 전력수단임을 재인식하고 있다.

電力問題 解決의 열쇠

이즈음 필자가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우선 강력한 전력에너지(원전) 정책의 발표인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TV 앞에 나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특히 전력에너지의 어려움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논리있게 전개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대통령이 TV에서 정치, 사회에 관한 특별담화

발표장면을 보았지만 원전이나 에너지 전반에 걸친 대국민 호소를 경험한 바 없다.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미국에서도 원전개발의 불가피성, 폐기물처분장 설치의 당위성 등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 교서로 발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흔히 과학입국만이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그 길만이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러나 과학입국이란 바로 에너지의 확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국민 에너지 계도가 필요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에는 전력의 중요성과 원전의 기초지식을, 대학생 교양과목에는 세계 에너지 수급상황과 원전개발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자료를, 일반인에게는 원전에 관한 일반상식을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튼튼한 Infra-Structure를 이루어 놓아야 된다.

TV처럼 인류사회에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 매체도 없다. 새 정부에서도 국영 TV 프로그가 과거처럼 주로 노래 부르고, 춤추며, 웃고, 떠들고 운동만 하는 모습을 그것도 황금시간대에 방영만 하고 있을 것인지 우리 국민은 주시할 것이다.

■